

이-윤, TV 토론 기사움 팽팽...4자 토론 안갯속

야, 양자구도 굳히기...알권리 지적엔 “방송은 자유” 윤 “다자 검증 어렵더라”...안 “윤 빼고 3자토론을”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간 양자토론을 다시 고수하면서 설 연휴 기간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TV토론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든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로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법원의 제동으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불발되자, 방송사

가 중개하지 않는 별도의 양자 토론을 역제안한 것이다.

윤 후보와 이 후보간 양자 TV토론을 불허한 전날 법원 결정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한 상태였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중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 3사의 공동 중계가 아니고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도) 문제없지 않나”라며 “이미 (민주당과) 양자토론 합의가 된 거라 방송사 공동 중계 없이 양자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역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4자 대선후보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만 “양자 토론이 필요하면 병행해서 진행하겠다. 양자 토론으로 4자 토론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영매체가 조정하는 식의 양자토론은 곤란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

한 사항(양자토론)은 하지는 취지”라며 “물론 제가 (양자토론 역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다. 다른 후보와도 다양한 형태로 토론 제안이 온다면 특별히 배제하고 이렇 생각없이 원칙에 따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31일 4자 토론에 먼저 참여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31일 방송사 4자 토론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글쎄 그건 당에 계신 분하고 상의해야 할 것 같은데”라며 “제가 우리 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자토론을 찍 해왔지 않나. 다자토론을 해보니 상단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토론 참여)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가처분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법원 결정전) 이미 양당 협의로 31일 양자 토론이 예정됐던 것이니, 양자 토론을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실무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사 주최 ‘4자 토론’에 대해서 “법정토론 횟수(3회)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

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시간·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자 토론은 ‘법정 3회’가 있어서 국민이 판단할 기회나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양자 토론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이게 제동이 걸렸으니, 방송사가 아닌 양당 합의로 하면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로부터 양자 토론 제의가 들어와도 협상할 수 있는냐’는 질문엔 “그것은 검토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설 연휴 기간 윤 후보를 뺀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TV토론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철수 후보 측은 “만약 국민의힘이 4자 토론을 거부한다면,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를 빼고 3자 토론을 진행하면 된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상호 민주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임명

“대선승리 기여할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27일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우 본부장은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선두에서 정치 교체와 정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이자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 본부장은 정확한 정세 분석과 합리적이고 유연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 왔다”며 “대선 때마다 공보단장, 공동선대위장 등 중책을 맡아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본부장은 앞으로 선거 운동을 총괄하며 국민 열망인 정치 혁신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맡게 된 총괄선대본부장은 당초 선대위에 존재하지 않던 직으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우 의원은 상임선대위장인 송영길 대표와 함께 전략·정책·조직 등 선대위 전반의 콘트론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여·야 추경 논의 돌입... ‘증액’ 주목

기존안 대비 2~3배 규모

국회가 27일 정부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다.

이후 추경안과 관련이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1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증액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양당 모두 추경 규모를 14조원 상당 정부안보다 2~3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우선 민주당은 ‘충분히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35조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택시 노동자, 요양보호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기왕에 합의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의 당 회의에서 “지난해 초과 액수는 본예산 282조 원 대비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추계 오류가 본예산 대비 20%를 넘는다”며 정부

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반반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막아온 게 바로 홍남기 부총리였다”며 “추가 수입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수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에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내년 추경 증액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야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조정을 맞추는 기류다. /연합뉴스

정기 브리핑

서삼석, 농어가 소득증대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방안’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 의원이 헬스경향(대표이사 조창연)과 공동 주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방안과 도시민과 달리 의료·교통·교육 등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심화,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호 교수는 농·어업 분야 의제를 발표했다. 힘든 노동에 비해 열악한 농가소득 등 농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분권형 지역 자율농정체계 등 향후 농정 추진 방식에 대해 제안했다.

서 의원은 “식량위기 극복과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헌법에서 천명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한국 농업의 현실에 대한 정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국회의원 2021년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결과]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재산 평균 5억 축소

부동산 재산 축소하지 말고 시세대로 투명하게 신고하라!

2022. 1. 27(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촌빌딩 1층 주최: 국회의원 105명

보유 아파트 ‘평균 5억 축소’ 신고 27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2021년 보유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CLASS 중흥S-클래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2020 건설업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수상복합부문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국 주요 사업실적

- 안산 선부동 중흥S-클래스
-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 서울 천호동 중흥S-클래스
-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